

참여정부와 지방의제21의 새로운 과제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이사장

지구환경의 악화정도를 가리키는 <환경위기시계>가 92년도부터 가동되고 있다. 이 시계는 일본의 아사히 초자재단이 세계의 90개국의 정부 및 민간전문가 6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만드는 것이다. 환경위기시계의 시간별 위험정도는 6시부터 9시까지는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9시부터 12시까지는 매우 불안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구환경과멸의 시간은 12시이다. 조사를 처음 시작한 92년도의 시간은 7시49분이었는데 2002년도는 9시를 넘기고 있으니 이것으로 보자면 지구의 환경은 현재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하겠다.

요즘 우리나라 환경인들에게 참여정부의 환경마인드시각을 묻는다면 과연 몇 시라고 답할까? 아마도 오늘의 지구환경위기시계가 가리키는 시각보다 더 더욱 불안하다고 말할 것이 분명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최근 참여정부가 지속가능발전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인 현안들에 대한 일련의 대처에서 미덥지 않은 행보를 거듭하고 있어서이다.

참여정부를 준비하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불거진 이런 저런 문제들과 10대 국정과제에서 환경과제가 누락된 것을 비롯해서 이제는 국제적인 운동으로 진출하기에 이른 새만금을 살리기 위한 종교지도자들의 생명을 내건 65일간의 삼보일배 행진에 대한 정부의 냉담한 태도는 수많은 국민의 마음을 싸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듣기에 좋았던 참여정부의 이름을 무색하게 하기에 족했다.

참여정부의 환경관련 정책에 대한 실망감은 국가의 주요과제를 다루기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된 3개 위원회와 5개의 태스크포스팀 구성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각 기구의 구성에는 관련부처의 장관들이 참여하도록 되어있어서 부처에 따라서는 여러 기구에 걸쳐서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모든 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부는 어느 한 기구에도 끼여 있지 않은 것도 우연은 아닌 듯싶다. 참여정부의 환경마인드의 현주소가 밝혀진 것이다.

우리나라가 환경관련 정책에 보다 주력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으로서는 10위권에 그리고 인간개발지수는 30위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 2002년도의 세계경제포럼의 환경 지속성 평가에서는 142개 국가 중에서 136위라는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환경무역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서도 환경정책의 강화는 필요하다.

21세기의 국제적인 화두는 지속가능발전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정의 실현과 자연환경보전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는 정책간의 통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과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계의 90여개 국가에서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활약하고 있다. 2000년도에 구성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현재 해체된 채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다된 오늘까지 어떤 모습으로 재생될지 오리무중에 있다.

환경인들이 혹시나 하고 기대를 걸었던 2003년도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는 유례없이 대통령이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국무총리의 치사도 환경부장관이 대독하는 것으로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그동안의 보도에 의하면 국가적인 갈등조정을 위해 '국민통합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한다. 이 위원회는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각자 5인씩 추천한 80명으로 조직되는 상원격의 기구이다. 그리고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화와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협력체제인 '지역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것이다.

이 기구들은 이미 가동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그리고 지방의제 21 실천기구와 그 기능이 유사하여 중첩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점이 있다면 새로운 기구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배경으로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지방의제 21 전국협의회가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음달 8.15기념행사에서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국정목표로서 '2만 달러 시대를 위한 국가 개조론'을 공식 제기한다는 문제이다. 국가 경제라는 파이를 크게 한다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국민소득 1000달러를 목표로 하였던 박정희 대통령의 목표달성과정에서 빚어졌던 악몽들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개발의 상징이었던 청계천 고가도로가 철거되는 행사가 있기도 했고, 세계경제는 구조적으로 저성장을 지향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대선공약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미 한계를 드러낸 성장위주의 패러다임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는 것은 전국의 지방의제 21 실천기구들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다.

남은 문제는 다가온 도전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지방의제 21 전국협의회가 참여정부가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라는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새로운 과제를 모색하고 개발해서 지난해 요하네스버그에서 의제21을 행동21로 전환하자고 다짐했던 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전국의 90%이상의 지자체에서 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정부, 기업, 시민의 협력체제인 지방의제 21의 가족이야말로 지방분권화와 국가의 균형발전과 이 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내는 자발적이며 힘 있는 역군이라는 자부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